

보 도 자 료

작 성 부 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재정개혁지원관실	담당자	예산 개혁팀	정 한 팀장 02-398-4120 박현창 서기관 02-398-4131
			조세 개혁팀	은희훈 팀장 02-398-4150 조용래 서기관 02-398-4151
보도일시	2019년 2월 26일(화) 12:30 이후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재정개혁보고서」 확정

< 재정특위 활동 내역 및 재정개혁보고서 마련 배경 >

-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 이하 ‘재정특위’)는 2월 26일(화) 오전 10시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재정개혁보고서」를 심의·확정하고, 동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 재정특위는 ‘18년 4월 발족 이후 전체회의·조세·예산 소위원회를 각각 4차례·26차례·20차례 개최하여 조세·재정 분야 개혁과제를 발굴·토론하였고,
 - 정책토론회·워크숍(3차례) 개최 및 여론조사를 통하여 조세·재정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이를 바탕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비전 및 목표, 조세·예산 개혁방안 등을 담은 「재정개혁보고서」를 마련하였다.
- 재정특위는 재정개혁보고서에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및 성장잠재력의 둔화 문제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 성장과 분배가 조화로운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즉 혁신적 포용 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여 혁신성장, 소득주도 성장, 사회안전망 확충, 사회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공정경제·공정사회를 이룰 것을 주문하였다.

□ 특히, 적극적 재정정책의 기반이 되는 재정여력은 현재는 양호하나 저출산·고령화, 잠재성장률 둔화, 복지지출 증가로 국가 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 재정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관리 방안으로서 국민의 재정지출에 대한 신뢰제고, 재정지출의 효율화 및 세입확충을 목표로 한 ‘재정 개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 재정개혁보고서 비전 및 목표, 추진과제 >

□ 재정특위는 재정개혁보고서에서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견인하는 지렛대’라는 비전과 ① 공평과세를 통한 안정적 세수기반 마련, ② 투명한 나라살림 및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라는 목표 하에

○ 조세·재정분야의 제도 개혁과제와 함께 혁신성장·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조세분야에서는 ① 공평과세 강화 ②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③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3대 추진 전략 하에 24개 개혁과제가 제시되었는데,

○ 이는 우리나라 조세가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소득재분배 효과가 취약하므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세체계의 수직적·수평적 공평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기회가 균등한 공정경제·공정사회’를 우선적으로 실현하기 위함이다.

- 또한, 재정건전성을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조세구조의 선진화를 통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저출산·고령화 및 ‘고용없는 성장’ 시대에 세제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개혁과제가 제시되었다.

□ 재정특위는 공평과세 강화를 위하여, 1주택자 양도소득세 합리화·공시가격 제도 개선 등 부동산세제 합리화 과제와, 상속증여세제 개선 과제 및 주식양도차익과세 개편 등 소득세제 합리화 과제를 발굴하였고,

- 세입기반 확충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재원마련의 원칙을 제시하는 한편 미세먼지 저감·환경보호를 위한 친환경적 조세개혁 과제 및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세 불복제도 개편방안 등을 권고하였다.

- 이와 함께, 벤처 창업·투자자 지원, 4차 산업혁명 지원, 청년·노인 근로자 지원, 다자녀가구 근로자 세부담 완화 등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조세분야 과제도 제시하였다.

□ 예산분야에서는 ① 알기 쉽고 투명한 재정, ② 통합적·거시적 재정 운용, ③ 효율적 재원배분을 위한 제도개혁 등 3대 전략에 기초하여 12개의 개혁과제가 제시되었는데,

- 이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재정정보를 알기 쉽고 투명하게 제공하여 재정 운용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 국가 재정의 낭비와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을 통합적·거시적으로 운용하며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 재정특위는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재정정보의 통합 공개,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나라살림 정보 제공, 국민 관점에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알기 쉬운 예·결산 정보의 제공 등을 권고하였다.
- 아울러, 정부 전체(whole of government) 관점에서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는 ‘중기재정분석보고서’의 작성, 기금·특별회계 등 재정의 칸막이 해소, 건강보험의 국가재정 편입,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연계 등 통합적·거시적 재정 운용을 위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 또한, 국가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재정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제고, Top-down 예산제도 보완, 전략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 제도의 도입을 최종 권고안에 포함하였다.

< 재정특위 향후 계획 >

- 재정개혁보고서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으로서 실제 시행 여부는 정부·국회 내 논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 재정특위는 금일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공식 활동을 종료하며,
 - 잔류인력은 활동 종료에 따른 기록물 정리 및 결산 등 청산 업무를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 전체회의 논의 결과 권고안의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회의직후 별도 배포할 계획이므로 수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 첨 > 1. 재정개혁보고서